
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

2025. 12. 11.

목 차

I. 일반현황	1
II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	2
1. '25년 성과 및 보완점	2
2. 향후 업무추진방향	4
III. 중점 추진과제	6
1. 튼튼한 식량안보체계 확립(국정-68)	6
2. 전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(국정-68)	7
3. 농축산물 유통개혁 추진(국정-68)	8
4. K-푸드+ 수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(국정-68)	9
5. 농업·농촌의 스마트화 확산(국정-68)	10
6. 선진국형 농가소득·경영안전망 구축(국정-69)	11
7. 농업인력 및 필수농자재 지원 강화(국정-69)	12
8. 청년농업인재 육성(국정-69)	13
9.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(국정-70)	14
10. 누구나 살고 쉬고 일하고 싶은 농촌 조성(국정-70)	15
11. 농촌 공동체 회복 및 사회경제 서비스 확대(국정-70)	16
12.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(국정-80)	17
13.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(개혁과제)	18
IV. 주요 쟁점이슈	19
1. 농지 제도 개선	19
2.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	20

I. 일반현황

1] 기구 및 조직 현황



2] 인원 현황

(25.11.30. 기준)

구분	직급별	계	정무직	고공단	3.4급	4급	4.5급	5급	6급이하	기타
합계	정원	3,697	2	26	18	98	84	614	2,739	116
	현원	3,607	2	26	18	100	77	620	2,659	105
본부	정원	681	2	17	13	36	64	242	302	5
	현원	683	2	18	12	40	60	246	300	5
소속기관	정원	3,016	-	9	5	62	20	372	2,437	111
	현원	2,924	-	8	6	60	17	374	2,359	100

3] 예산 현황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2025 예산 (A)	2026년 예산 (B)	증감 (B-A)	증가율
계	187,416	201,362	13,945	7.4
◇ 사업비	182,834	196,595	13,761	7.5
▣ 농업·농촌	172,162	185,391	13,229	7.7
• 혁신성장·체질강화	39,706	44,743	5,038	12.7
• 농가소득·경영안정	53,722	56,605	2,883	5.4
• 농촌복지·지역개발	13,597	16,815	3,218	23.7
• 양곡관리·유통혁신	45,718	45,301	△417	△0.9
• 재해대비·기반정비	19,419	21,927	2,508	12.9
▣ 식품	9,383	10,198	815	8.7
▣ 동물복지	781	506	△275	△35.2
▣ 기타 사업비	507	499	△8	△1.6
◇ 기본적인 경비	4,583	4,767	184	4.0

Ⅱ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① '25년 성과 및 보완점

[1] 국민주권정부 6개월의 성과

- (농업 4법 등 개정) 새 정부 시작과 함께 국회·농업계와 긴밀히 논의, 농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**농업 4법** 등 신속 개정(8월)
 - 「양곡관리법」 개정으로 양곡 수급계획 수립,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등 선제적 수급관리정책 제도화
 - * (사전) 양곡 수급계획 수립, 계획한 논 타작물 재배 관련 재정 지원 근거 마련 (사후) 초과생산량 또는 쌀값 하락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정부 책임 강화
 - 선제적·자율적 수급 정책 제도화, 유사시 가격안정제 운영 등 「**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**」 개정
 - 「농어업재해보험법·대책법」, 「필수농자재등지원법」 등 제·개정
 - * (보험)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 (재해지원)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
- (수출 확대) K-푸드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및 글로벌 확산
 - 농식품 수출은 전 세계적 관심에 힘입어 11월 말까지 94.6억 불 (전년比 4.6%↑)로 역대 최대 실적 및 최초 100억 불 돌파 예상
 -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28.7억 불로 전년 대비 8.7% 증가
 - K-푸드의 글로벌 열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세대 품목·시장 개척, K-컬처·뷰티 연계 등 범부처 「**글로벌 K-푸드 수출 확대 전략**」 마련(12월)
- (민생 안정) 쌀 등 선제적·안정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과 함께, 민생 체감형 규제를 신속·과감하게 개선
 - 쌀은 공급·격리 등 적기 시장 조치로 '25년 수확기 쌀값을 회복*하고, 수요 집중 시기 맞춤 대책 추진으로 명절 상차림 비용 및 김장 물가 안정
 - * ('24년 수확기 쌀값) 184,700원/80kg → ('25.11.25일) 228,184(수확기 대비 23.5%↑)
 - ** 추석 상차림 비용(199,693원) : 전년比 1.8%↓ / 김장 비용(201,151원) : 전년比 5.9%↓
 -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등을 활용해 외식 부담 완화에도 기여
 - 유통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도매시장 공정 경쟁 촉진, 소비자가격 정보 제공(앱 개발) 등 「**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**」 마련(9월)
 - 특히, 핵심과제인 **온라인도매시장**은 올해 거래액 목표 1조 원 조기 달성*
 - * 유통비용률 8.7%p 감소(15.6%→ 6.9), 농가수취금액 4.6% 상승(9월, 청과물 기준)

-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‘천원의 아침밥’ 지원 대상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(10월)하고 **농식품 바우처**도 본 사업으로 전환
- **벼 깨씨무늬병** 처음 재해 인정, 농지에 **주차장·화장실** 등 설치 허용(9월 세종 청년농 간담회 건의), **여성농업인**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등 오랜 숙원 해결
 - * 한여농, 전여농 등 대다수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환영 성명서 발표
- **(균형 성장)** 국가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**농어촌 기본소득, 햇빛소득마을**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설계
 - **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모델** 구축을 위한 10개 지역* 시범사업 대상 선정, 「**햇빛소득마을 추진계획**」 수립('25.9월)
 - * 연천, 정선, 청양, 순창, 신안, 영양, 남해 + 옥천, 장수, 곡성
 - 전력수요가 많고 계통에 여유있는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조성 추진(10월)
 - 농촌 5개 시·군 최초 **농촌공간계획** 수립 완료(11월, 113개 시군 수립 중), 빈집 지원체계 정비*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
 - * 농촌 빈집 철거지원사업 행안부→농식품부 이관,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(8월)
 - 왕진버스, 이동장터 등 방문형에서 **배달형으로 농촌 서비스** 공급 개편*
 - * 왕진버스 : ('24) 9.1만명→ ('25) 20 / 이동장터 : ('24) 5개소→ ('25) 9
- **(일하는 방식)** 농업인·소비자단체·농식품 기업 등 정책고객 174명이 참여하는 ‘**함께 만드는 K-농정협의체**’ 운영 등 양방향 소통 강화*
 - * 식량·유통, 미래농업·수출, 농촌, 농업·축산경영, 동물복지 등 5개 분과 운영 중, 11월 말까지 47회 분과회의 개최

[2] 보완점

- 식량안보 등 **농업 본연의 역할**을 강화하고,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**구조적 문제 해결, 혁신 기술 활용** 등 필요
 - 구조적 쌀 공급과잉, 낮은 생산성, 농지 이용도 저하 등을 개선하고, 비효율적 유통구조, 농협 등에 대한 개혁도 필요한 시점
 - 스마트농업 확산, AI 기술 활용 등을 위해 민간 협업과 투자를 촉진하고, 글로벌 K-푸드 열기 등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 필요
- 한편, 인구감소·고령화·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**청년들의 농촌 창업, 도시민의 라이프 스타일(4道3村 등)** 등 트렌드 변화를 적극 활용 필요
 - 전통·문화·음식·경관 등 농촌의 고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 먹거리와 동물복지 등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

② 향후 업무추진방향

[1] 농정 비전 및 운영 원칙

- 국민주권정부 농정 비전은 농업·농촌 분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‘국민과 함께하는 농업,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’으로 설정
 -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동력으로 농정을 새롭게 전환
- 새 정부 농정 평가를 좌우할 국정과제 조기 성과 창출에 주력
 -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천하면서 현장체감형 정책을 최우선으로 민생과 직결 분야는 세심하게 관리
 - 특히, 국민주권정부의 핵심정책(K-푸드 수출, 유통개혁 등), 신규사업 (AX 플랫폼, 기본소득, 영농형 태양광 등) 구체화 및 현장 착근에 역량 집중
 - 개혁과제·쟁점 이슈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·설득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,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숙의하여 제도화
- 기후변화, 농촌소멸 대응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의 연속성은 유지하되, 현장과 소통하면서 낡은 관행·규제는 과감히 혁신

[2] 추진 체계

-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 확립, SNS 등을 적극 활용한 양방향 소통 확대
 - 농업인, 소비자단체, 농식품 기업 등 정책고객 174명이 참여하는 ‘함께 만드는 K-농정 협의체’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
 - 연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, 추가 논의 및 공론화 필요 과제는 농특위·워킹그룹 운영을 지속하면서 새 정부 ‘민관 정책 협치 모델’로 자리매김
 - 대국민 정책 의견수렴 채널인 ‘모두의 농정 ON’(특별홈페이지) 본격 가동
- 중앙정부는 현장 체감형 규제·제도 개선, 혁신·실용 관점의 정책·조직 재설계로 정책 고객의 효능감 제고
- 지방정부는 책임과 권한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과 재정 (지방이양 등) 등에 자율성을 갖는 자치분권형 거버넌스 구축

[3] 국정과제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

□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(국정과제 68번)

- 식량안보체계 확립, 안정적 농식품 생산·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중장기 수급안정 정책으로 전환
- 국민 관점에서 유통구조도 전면 혁신 및 국가 차원의 먹거리 돌봄 강화
- AI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, 민간의 다양한 경험·기술·자본 등 적극 활용
- K-푸드 수출은 과거 기업 지원·물량 중심에서 K-컬처·뷰티 등 K-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전략으로 전환(H/W→ H/W+S/W)

□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 대전환(국정과제 69번)

- 소득·가격 불안정 및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농가 경영안전망 강화
- 부족한 농업인력 공급 확대, 필수농자재 지원 체계화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, 공동영농 확산을 통해 규모화·효율화
- 준비된 청년 중심으로 정예화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(양→질)하고, 농업인 은퇴 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

□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(국정과제 70번)

- 농촌이 국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, 햇빛소득마을 등 신규 정책 안착
- 전통·문화·음식 등 농촌 특화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제고
- 농촌주민 삶의 질 사각지대를 메우는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강화

□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(국정과제 80번)

- 동물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·제도 기반을 강화하고, 정책 범위도 확장(반려동물→ 비반려동물)
- 반려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의료 혁신 추진

Ⅲ. 중점 추진과제

① 튼튼한 식량안보체계 확립 (국정과제 68)

◆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쌀 적정 생산 및 주요작물(밀·콩)의 수요에 기반한 **자급률 제고**에 주안점을 두어 제도 재설계
* 식량자급률 : ('23) 49%→ ('30년 목표) 55.5+@

- **식량 자급 목표를 상향**하고,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,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
 - * 다양한 정책 고객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「식량안보법」 제정 검토
 - 식량안보의 개념 정립, 식량안보 측정 지표 개발, 현행 자급률 체계 개선을 통한 자급률 목표 재설정 등 **세부 실천계획 마련**(’26.12월)
 - 유사시 대비 밀·콩 등 **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***을 지속하고, 수입의존도 높은 경제안보품목 지정·관리 강화 및 수입국 다변화 유도
 - * 민간기업 해외(미주, 동남아 등) 진출시 용자·보조 지원(현황조사, 컨설팅, 토지 확보 등)

- 「양곡관리법」 개정안* 시행(’26.8월)에 맞춰 타 작물 재배 전환 등 선제적 **쌀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 구체화**
 - * 정부 사후대책 의무화 기준 범위,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등
 - 작목전환(쌀 → 전략작물)에 대한 **충분한 인센티브***, 전략작물 중심 **생산·기반시설 우선 지원**** 등으로 선제적 수급 조절 실행력 제고
 - * 전략작물직불(하계) 품목 수/예산 : ('25) 5개/2,440억 원→ ('26) 10(잠정)/4,196
 - **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('25: 479개소→ '26: 509), 산업화 지원('25: 533억 원→ '26: 564)
 - 적정 수준의 쌀 공공비축 시행 및 ‘수급조절용 벼’ 신규 운용을 통해 수급 변동 상황에도 대비

- 실질적인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**쌀과 전략작물 소비 기반 확대**
 - **밀·콩의 국산화**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재배, 제품개발*, 홍보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, ‘**GMO 완전표시제****’ 도입 계기 신규 수요처 확보 추진
 - * 국산 콩기름, 두부스틱, 면두부, 단백질 파우더(콩 분리 단백질) 등
 - ** GMO 원재료가 사용되면 가공 후 DNA·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의무 표기
 - 친환경 쌀 생산, 밀 블렌딩 등 **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화 지원***
 - * 친환경 벼 전환, 수요 많은 제빵용 밀 품종 재배 유도, 품질 균일화(밀)를 위한 블렌딩 등

② 전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(국정과제 68)

◆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식품 지원을 확대하고,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가정 식비 보장과 식품 복지 사각지대 해소

-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 식생활 돌봄을 위한 ‘직장인 든든한 한끼’ 사업까지 확대
 - 올해 파일럿으로 추진 중인 ‘산단 천원의 아침밥’ 사업 대폭 확대
 - * ('25, 파일럿 사업) 5만 식/산단 14개소 → ('26, 시범사업) 90만 식/34개소
 - 인구감소지역·산단 등 취약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도 신규 지원
 - * 월 4만 원 한도, 중식 연간 500만 식 지원, 지방정부-외식업체 간 협약 체결을 유도, 인근 식당 소개 및 지방정부 지속 지도·점검을 통해 외식물가 상승 억제 유도
 -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기존 ‘천원의 아침밥’ 지원인원을 확대 ('25: 450만 식 → '26: 540)하고 ESG 경영실천 기업*의 적극적 참여 유도
 - * '25년 NH투자증권은 26개 대학(비수도권·국공립대)에 5.3억 원 기부
- 시범사업 이후 중단되었던 취약계층 등을 위한 농산물 지원사업 재개
 - 늘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간식 지원 추진('26.3월~)
 - 지역별 과일공급업체 조기 선정('26.2월) 등 내년 사업 차질없이 추진
 - 교육부·지방정부와 협업 확대로 과일간식 전달체계를 확립하고, 학교 홍보 강화, 위생 점검 등 추진(광역·기초 협의체 운영)
 -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도 전국 대상으로 본격 시작
 - 시범사업보다 지원규모 대폭 확대('22: 임산부 8만명 → 중단 → '26: 16), 지방정부·농업인단체 합동 TF를 통해 추진계획 구체화(~'26.3월)
 - 친환경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위해 인증제도개선 및 쌀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·소비기반 확대
- 영양 공급이긴요한 임산부 등이 포함된 생계급여 가구에 농식품 이용권을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는 청년까지 지원대상 대폭 확대
 - * ('25)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18세 이하 가구(8.7만 가구) → ('26) +청년 포함 가구(16만)

③ 농축산물 유통개혁 추진 (국정과제 68)

◆ 온라인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을 재구조화*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도매법인 경쟁체계 구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단계 축소

* 온라인 도매 유통 비중 : ('25) 6% → ('26) 10 → ('30) 50

◆ 축산물은 가격 결정 투명화, 경쟁 촉진 등 합리적 거래기반 조성

□ 온라인시장 거래규모 1.5조 원('26) 목표로 제도 및 활성화 기반 마련

○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을 연내 제정*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체계 구축**, 거래중개인·품질관리사 육성 등을 통해 대표 시장으로 안착

* '25.12.4,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** '26, 공동수집·합배송 등 거점물류센터 3개소 운영

○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확대(~'26, 115개소), 생산·유통 통합조직 육성 (~'26, 81개) 등 산지 유통의 디지털화·규모화도 병행

□ 도매법인 간 경쟁체계 구축 및 공익적 역할 확대 등 도매시장 제도 개선

○ 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등을 담은 농안법 개정('25.12, 상임위 의결) 및 엄정한 평가체계 운영('26~)

○ 도매법인 출하가격보전제* 도입('26, 가락시장 시범), 경매 중심에서 예약형 정가·수의로 거래방식 전환('24: 5%→ '26: 10) 등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

* 경매물량 집중 등으로 가격 급락 시 도매법인이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출하비용 보전

□ 소비자들을 위한 '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(앱)' 개발

○ 누구나 인근 판매처별 농산물 가격, 할인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앱을 5개 지역 시범 적용('26.下) 후 전국 확대('27)

* '25.11월, 관계부처 합동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선정('26~'27, 30억원)

□ 축산물은 비효율적 유통 관행 및 가격 조사·결정체계 개선

○ 한우는 도·소매가격 연동성 강화(농협 권장판매가격 제시 등)와 함께 단기 비육 한우고기 유통 확대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

○ 계란·닭고기는 가격 조사·결정체계를 개선*하고 계란 중량규격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개선(왕·특·대·중·소란→ 2XL~S)

* (계란) 특·대란 가격을 물량기준 가중평균 산출, (닭) 생닭 → 부분육

○ 축산물 가격 비교 가능한 '여기고기' 앱 활용 확대('25: 4천개소→ '26: 5)

④ K-푸드+ 수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(국정과제 68)

- ◆ K-이니셔티브를 연계·활용하여 '26년 K-푸드+ 수출 150억 불 달성
- ◆ 수출기업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 제고

- 민·관 합동 'K-푸드 수출기획단*'을 출범(12.23 잠정), 시장 조사 및 수출 기획 단계부터 K-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맞춤형 전략 체계화
 - * 관계부처(문체부, 외교부, 산업부, 중기부, 식약처 등), 유관기관(aT, KOTRA, 콘텐츠진흥원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), 민간(수출기업, 바이어, 콘텐츠 기업 등) 참여
- UAE*를 거점으로 중동·아프리카 등 가능성이 높은 시장 집중 공략, 기업 진로에 필요한 상호인정(MRA) 확대 및 인증 지원 강화
 - * 국제 할랄식품박람회(Gulfood, 1월) 참가 지원, K-할랄푸드 페어 개최 등
- 시장별 특성에 맞는 '글로벌 K-푸드'를 선정하여 제품 개발부터 판로까지 맞춤형 지원
 - K-푸드 소재 콘텐츠, 글로벌 OTT·유튜브 등 활용 마케팅 추진
- 수출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
 - K-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,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('25: 360억 원→ '26: 720) 및 해외 물류인프라 확충
 - * K-푸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거점공관 내 K-푸드 담당관 임무 부여(1월) 등
 - K-스마트팜 전시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('26~) 및 해외 시범온실 조성, 코트라 중점무역관 운영 등 해외 진출 지원
- 트렌디한 한식을 주제로 한 관광상품 개발 및 글로벌 확산기반 마련
 - K-미식벨트(치킨) 조성('26) 및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('25: 4개소→ '26: 6)
 -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확대('25: 누적 23개소→ '26: 30)하고 해외 일반 한식당 인증제 신설 등 제도 개편
 - 글로벌 한식 교육프로그램 마련(가칭: 수라학교) 및 현지 교육기관 연계*
 - * 미 CIA, 르꼬르동블루(프랑스), 알마(이태리) 등
 - 우리술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전통주·한식 등을 홍보하고 찾아가는 양조장 확대('25: 64개소→ '26: 69)

5 농업·농촌의 스마트화 확산 (국정과제 68)

◆ 기후변화, 농업·농촌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고, 생산성·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업·농촌 전반에 **스마트화·인공지능 활용 확산**

□ AI 기술을 농업·농촌 분야에 접목·확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

○ 농업·농촌 특화 AI 응용제품·서비스 신속 상용화*('26: 400억 원, 25개)

* 공모('26.1)→ 주요 과제 선정('26.3)→ '26년까지 15개, '27년까지 10개 상용화

○ 스마트농업 혁신성장펀드 결성('26: 500억 원), 농식품 벤처 스케일업('26: 75억 원) 등 금융·자금지원도 병행

○ 농식품 R&D를 대폭 확대('26: 2,617억 원, 15.5%↑)하고, 스마트농업 데이터 솔루션 공유 인프라 구축 투자

* 스마트농업 데이터·솔루션 공유허브 구축 ISP 수립('26: 9억원)→ 시스템구축('27~'29)

□ 지구단위 집적화 및 AI·데이터 등 접목 K-스마트농업 고도화

○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확대('25: 5개소 → '26: 15, 온실 10, 노지 5)하고 1개소는 AX 선도지구 지정, 스마트축산단지 확대('25: 누적 5개소 → '26: 7)

- 선도지구 내 AI를 접목한 생육 알고리즘 및 최적 영농솔루션 적용, 에너지 자립 등 첨단기술을 집약한 민·관 합동 AX플랫폼 구축

○ Agent AI 등 AI·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 환경 최적화를 돕는 솔루션의 농가 보급 확산('25: 누적 44백 농가 → '26: 55)

○ 가축방역정보 DB 기반 AI 예측모델을 활용, 위험지역을 선별·집중 관리하기 위해 가축방역통합시스템(KAHIS) 고도화('26) 및 차세대 KAHIS 구축 추진

□ 시설·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노지·중소 농가 등 전체로 스마트농업 확산

○ 노지 주요작물 주산지에 스마트농업 기술 패키지*를 보급하여 생산성 제고 및 기후 대응력 강화('26: 5개소, 103억 원)

* (예) 스마트 관수 제어 장비 + 원격 제어용 솔루션 + 전기·통신 등 연결 기반조성

○ 일반 농가도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K-스마트팜 모델을 개발('26)·확산, 스마트팜 종합자금 확대('25: 1,000억 원 → '26: 1,500)로 기술 접근성 제고

* 0.5ha 이하 비닐하우스 대상 ①전환형과 ②신규 구축형 표준모델 개발('26.4Q)·확산('27)

6 선진국형 농가소득·경영안전망 구축 (국정과제 69)

◇ 공익직불금 확대, 가격안정제 도입 등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, 정책보험 확대 등 선택안전망 확충으로 두터운 소득안전망 구축

- 기초 소득안전망으로서 공익직불제 확대, 가격안정제 도입 등 추진
 - 농업 외 소득 3,700만원 이상 농가는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였으나, 최신 소득 통계 반영, 주기적 갱신 등 합리적으로 개선
 - 전략작물직불 지원품목 확대(8개→ 13 잠정, +수급조절용벼 등 추가) 및 단가 인상*, 친환경농업직불 면적 확대로 선택직불금 지원 강화
 - * 전략작물직불금 단가 : (조사료) 500만원/ha→550, (옥수수·깨) 100→150
 - 탄소중립·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 직불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
 - 「농안법」 개정안 시행('26.8.27.)에 맞춰, 불가피한 농산물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*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위험 완화
 - * 경영비, 자가노동비 등 농업에 투입되는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정하고,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인 경우 차액 보전
 - 생산비 등 객관적 통계가 구축된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, 수급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농가의 수급정책 참여 유도
 - 국회·농업인단체 협의를 거쳐 기준가격지원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('26.8월)
 - 재해 발생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재해복구비 지원체계 개편*(재해대책법 하위법령 개정, '26.8월)
 - * (기존) 재정식·재파종 비용인 대파대 지원 → (개선) 재해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 지원
- 재해보험·수입안정보험 등 농가 책임을 수반하는 선택 안전망 확충
 -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해보험료 할증 제외, 할인·할증 구간 세분화('25: 15단계→ '26: 35)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완화
 -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('25: 76 → '26: 78), 사과·배·단감 등 품목 대상 전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 신규도입 등 보장성 강화
 - 농산물 수량 감소, 가격 하락 위험 모두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지원대상 품목 확대('25: 15개 → '26: 20)

7 농업인력 및 필수농자재 지원 강화 (국정과제 69)

- ◆ 공공부문 농업인력 지원 체계화 및 필수농자재 지원 제도화
- ◆ 공동영농을 통한 농업 생산성 및 소득향상 모델 전국 확산

- 공공부문 인력 지원 확대, 근로환경 개선 등 농업인력 지원 체계화
 -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로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고,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도 확대
 - * 공공형 계절근로 : ('25) 90개소 → ('26) 130 (전체 농촌 시군 136개의 95.6%)
 - ** ('25) 기숙사 신축 지원(누적 30개소) → ('26) + 유희시설 리모델링 신규 도입(45개소)
 -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계절근로자 상해보험,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 의무화('26.2월) 및 인권 안전 실태점검 실시(상·하반기)
 - 국내 농업노동자의 농작업 숙련도 제고를 위해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프로그램 개발 및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교육 실시
- 「필수농자재등지원법」 제정('25.12)에 따른 공급망 위기시 필수농자재 지원을 제도화하고,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
 -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대처를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마련('26.12)
 - * 예시: (1단계) 원료수급가격동향 점검 (2단계)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검토, 할당관세 적용, (3단계) 한전농협 등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물량 공급, (4단계) 가격인상 차액 지원
 - 제도 수립 전까지는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비(국비 156억 원), 저리 사료 구매자금(9,500억 원, 1.8%), 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(3,000억 원)도 지원
- 농업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으로 농지 규모화 및 농업 생산성 제고
 - 공동영농확산 시범사업(6개소)을 통해 기반정비, 시설·장비 구매 등 종합 지원(개소당 20억 원), 성공모델 창출 및 규제 개선사항 발굴
 - * 문경 공동영농 사례 : 1기작 벼 → 2모작(하계 : 벼·콩, 동계 : 양파·감자)
농업생산액 3배(7.8억원 → 22.7), 농가소득 2배(2,350원/평 → 4,700) 증가
 - 공동영농법인의 농지 집적화를 위한 공공비축농지 우선 임대, 농지 교환·분합지원* 등 추진
 - * 기존 경지정리등 환지 청산 지원 → 공동영농 사업구역 내 농지 집적화 지원

8 청년농업인재 육성 (국정과제 69)

◇ 과거 양적 목표, 유입단계 중심 지원으로 인한 안정적 영농 정착 한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질 중심의 정예 청년농 육성 정책으로 전환

- 정예화된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지원
 - 영농의지·잠재역량은 높으나 창농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을 예비농업인으로 선발, 멘토링·교육 등을 지원하여 정예 청년농으로 육성
 - 예비농업인 지원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, 창업 준비단계 멘토링 시범 운영*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원사업 계획 수립
 - *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자 약 200명 대상 창업준비, 영농기술, 농업농촌생활 등 1:1 멘토링 지원
 - 청년농 농지 임차 부담 완화를 위해 비축농지('25: 2.5천ha → '26: 4.2) 및 선임대-후매도('25: 50ha→ '26: 200) 사업물량 확대, 임대상한 확대*
 - * ('25) 영농규모에 따라 3~6ha 임대→ ('26) 4~7ha(+1ha)
- 농업에 진입한 기존 청년농의 전문농으로 성장·재도약 지원 강화
 - 우수 청년농 대상 융자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검토, 청년농들이 영농역량 강화,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구성한 팀프로젝트 지원 확대
 - 청년농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육성자금 지원조건 다양화하고, 성장단계에서도 필요한 교육·컨설팅 수요 발굴 지원
- 농지이양은퇴직불 제도개선, 퇴직연금 도입 등 농업인 노후소득보장 강화
 - 질병, 사고 등으로 영농이 중단되어도 고령농이 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*(연속 10년 영농→ 총 10년)하여 농지이양 확대
 - * 농산물직불제규정(대통령령) 개정('26.上)
 -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사업 설계*, 근거 법령안 마련 등 추진('26.12)
 - * (도입형태) 장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돌려받는 저축 상품 검토, (정부지원) 농업인 납입액 비례 매칭 적립금, 시장이자율 외 추가 이자 지원 등 검토

9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(국정과제 70)

◆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도입하고, 면밀한 모니터링, 실증을 통해 성과주의 정책으로 자리매김

-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*과 협력하여 시범사업(개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)을 차질 없이 이행
 - * 경기연천, 강원정선, 충남청양, 충북옥천, 전남신안·곡성, 전북순창·장수, 경남남해, 경북영양
- 민·관 합동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('25.10.~) 및 기본소득을 연계한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* 이행 지원
 - *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순환경제 활성화, 지역공동체 재생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
- 지역공동체·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소멸 대응이라는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연계사업* 발굴
 - *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지원, 지역 푸드플랜 육성 등
 - 재생에너지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 추진
- 10개 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추가 확보 방안 지속 협의
- 증거 기반의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본사업 추진 방향 설정
 - 시범사업 시작 단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업하여 합동 연구 추진
 - 국책·민간연구기관, 시·도 연구원 및 학계 등이 참여하여 경제·사회·행정자치 등 분야별 실증연구 실시('26~'27)
 - 시행 전·후 및 시행-비시행 지역 간 비교 패널조사(1천 가구/군) 등을 통해 기본소득이 개인·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*을 종합평가
 - * (개인) 소득소비삶의질·교육고용·정주의향, (사회) 인구이동, 지역경제, 공동체·사회자본 등
 - 정책효과 홍보 및 사회적 논의 등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본 사업화 검토
- 관계부처·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「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*」 제정 추진(~'26.上)
 - * 정의, 대상지역, 지급 대상, 지급액, 기본·시행계획 수립, 지급·정지·회수절차 등 포함
 - ** 현재 10건(농어촌주민 3, 농어민 7)의 기본소득법 제정안 농해수위 회부('24.8.~'25.11.)

10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 (국정과제 70)

- ◆ 청년 비즈니스 창업, 도시민 4都3村 라이프스타일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
- ◆ 농촌부존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 경제를 견인할 특화산업 육성

-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간계획 조기 수립 및 특화지구 조성
 - 중앙·광역·기초단위 농촌공간정책 지원기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지역 139개 시·군의 중장기 발전계획* 수립(~'26.12월) 지원
 - * 139개 농촌지역 시·군 중 5개 수립 완료, 113개 수립 중, 21개 예산 확보 추진 중
 - 지방정부 주도 농촌공간계획의 지원사업 방식(현행 농식품부 사업 지원)을 다부처 패키지 형태로 개선('26~'28)
 - 재생에너지, 산업시설 등이 집적화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(최대 100억 원/개소) 및 규제 완화*
 - * 농촌특화지구 조성 관련 관계기관 협의절차 간소화,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 규정
- 농촌 빈집 관리·정비 기반 마련을 통해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혁신
 - 빈집 철거지원('25: 최대 7백만원/호→ '26: 16), 마을단위 빈집 재생(~'26: 4개소), 거래 지원(~'26: 40개 시군) 등 속도감 있게 빈집 정비
 - 「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12월 잠정) 및 정비 가이드라인* 마련('26)
 - * 빈집정비계획, 실태조사, 철거 및 관리기준,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등
- 다양한 농촌 자원*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
 - * 전통문화, 농가맛집, 농어촌체험시설, 치유농장, 양조장, 동서트레일, 치유의 숲 등
 - 시·군 연계형 광역 단위 특화자원 활용 농촌 관광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('26.上) 후 시범모델 개발('26.下)
 - 농식품 신 산업(그린바이오·푸드테크 등)을 농촌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*, 다양한 농촌 창업**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
 - * 그린바이오 육성지구(광역 7개 지정),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(5개소 구축) 등 활용
 - ** (현재)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 → (개선) 유희시설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 활용 경제
 - 농촌 민박 품질 제고를 위한 사전거주 요건 폐지(진입제한 완화), 빈집 활용 민박사업 제도화 등 「도농교류법」 개정 추진('26)

11 농촌 공동체 회복 및 사회경제 서비스 확대 (국정과제 70)

◆ 농촌 내 서비스 공동체 등을 육성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협약 등을 토대로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 확대

◆ 수요자 중심으로 농촌 필수서비스 공급방식 개편(방문형→ 배달형)

□ 농촌 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취약한 농촌서비스 인프라 보완

○ 농촌에 부족한 다양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*

* 주민 생활복지 공동체('25: 40개소→ '26: 60), 사회적농장('25: 누적 133개소→ '26: 160) 등

○ 시범 시·군(6개)과 협업하여 주민공동체와 함께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우수모델* 발굴 및 홍보·확산

* (예) 진안 백운 통합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밥상반찬나눔(월 4회), 주거개선(연 4회) 지원

□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·생필품·돌봄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

○ 농촌 중심지는 생활 SOC 복합센터(~'25: 1,181개소→ '26: 1,250)를 조성하고 배후마을과 공공·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충

○ '찾아가는 이동장터' 사업을 확대하고 참여주체(지역농협형, 공동체형) 및 운영방식(트럭, 키오스크 활용)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효율화

○ 의료 사각지대 왕진버스 운영 확대('25: 264개소→ '26: 353) 및 서비스 다양화*

* ('25) 체육관 등 거점공간 방문형 → ('26) +재택소규모 거점(경로당 등) 방문, 비대면 방식 추가

□ 교통 취약 지역에 AI 기반 수요맞춤형 농촌 교통모델* 개발 추진

* 영암 사례 : 버스 대기시간(90분 → 26) 절감 및 월 탑승객 수(3,489명 → 8,738) 증가

○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, 교통안전공단, 지방정부 참여 실증협의체 구성('26.上), 취약지역 실증사업 실시(5개군, '26~'27)

□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

○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* 및 온라인 신청(농업e지) 등 편의성 제고

* (지원규모) '25: 5만 명→ '26: 8 (지원연령) '25: 51~70세→ '26: 51~80세

○ 농촌형 보육 지원('25: 251개소→ '26: 263) 및 틈새 돌봄* 시범 운영('26: 2개소)

* 농번기 새벽·야간 시간대 돌봄 수요 발생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

12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(국정과제 80)

- ◆ 세계 최초 법정 ‘동물 보호의날(10.4.)’ 지정에 이어 **동물보호에서 복지로 정책 전환**을 위한 법·조직 등 정책기반 마련
- ◆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국민적 공감대를 튼튼히 하되, 사육 금지 등 **쟁점 있는 제도**들은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 도입

- **동물복지 정책 전환에 맞춰 법·제도 마련 및 정책대상 확장(반려→+비반려)**
 - 「**동물복지기본법**」 제정안* 마련('26), **동물복지진흥원 설립·운영방안 마련**(1월) 및 **설립** 위한 근거규정 마련(동물보호법 개정, '26.上)
 - * 반려농장·동물원·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 이념 반영,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등
 -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「**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**」 제정안* 마련('26) 및 **은퇴 봉사동물 대상 입양비 지원**(4월~) 등 **비반려동물 정책 확대**
 - * 기본계획 수립, 부처간 협력 체계, 정보시스템 구축, 검증센터 운영, R&D, 인력양성 등
- **반려동물 양육비 중 부담이 되는 진료비를 낮추고, 진료 사각지대 최소화**
 -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**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**(*('26.12월)
 - * 표준수가용역(~3월) → 수가심의위원회 구성(4월) → 공공·상생병원 수가제 도입(12월)
 - 취약계층의 반려동물, 유실·유기동물, 봉사동물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**공공동물병원**('26: 5개소) 및 **상생동물병원**('26: 5개소) 지정
- **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**
 - 동물사랑 배움학교('25: 65개소→ '26: 70), 고교 교과과정 운영 등 **인식 개선**
 - **동물학대 재발 방지** 위한 **사육금지제*** 및 **생산업 허가갱신제** 도입은 우선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 추진('26)
 - * 죽임상해 등 중한 동물학대로 유죄판결 시 1~5년간 동물소유보호관리 금지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
 - ** 동물영업 운영 실태조사(~9월)를 통해 관리인당 사육규모, 출산연령 제한 등 기준 마련
 - 「**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**」* 제정('26.上) 통한 산업의 체계적 근거 마련, 반려동물 제품·서비스 실증 및 R&D시설 등이 집적화된 실증단지 조성(10월~)
 - * 육성계획 수립,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, 벤처·창업 지원, 특구 지정, 전문인력 양성 등

13 (개혁과제)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

◆ 강도 높은 특별감사와 함께,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·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

□ 최근 농협에 대한 국회·언론 지적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

○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부적정 계약 등 의혹 제기사항과 함께, 자금 집행·인사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* 진행(~12월)

* 농식품부, 외부기관, 외부전문가(변호사, 회계사), 현장전문가 등으로 특별감사반 구성

- 익명제보센터(농식품부 홈페이지 내)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비위 문제에 대해 심층 조사·점검하는 등 감사 실효성 제고

○ 중앙회 자금·인사 투명성 제고, 조합장 임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「농협법」 법안소위 의결(12.4)

- 무이자자금* 배분과정의 회원공개의무 확대 및 전문기관에 의한 성과 분석·환류체계 도입, 주요 임원 인사 시 후보자 공개모집 원칙 확립

* 중앙회가 조합에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조합은 그 이자만큼 수혜('25: 16조 원)

-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*(2회),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(4년 → 1~2)

* 현재는 상임 조합장 2회, 비상임 제한 없음 / 4선 이상 조합장 103명, 최다 11선

□ 특별감사 결과, 문제가 확인된 사안은 단호하게 조치*하고, 이와 연계하여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추진('26.1분기)

* 시정명령, 징계·변상 등 조치, 불법 혐의는 수사기관 고발 등

IV. 주요 쟁점이슈

① 농지 제도 개선

- ◆ 다양한 의견이 있는 농지제도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하되,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는 우선 조치(농지법 개정)
 * 영농형 태양광 도입·확산, 농지 관리 체계 개선, 농지 임대차 활성화 등

- (현황) △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는데 농지만 규제한다는 지적과, △식량안보 차원의 농지 보전·관리를 강화*해야 한다는 요구 공존
 * 농지면적 : ('14) 1,691천ha → ('24) 1,505 / 국정과제로 목표 농지 면적 보전 의무화 포함
- (쟁점) 농지제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대립(활용 VS 보전) 및 향후 농지 규모화·집적화 추진 과정에서 재산권 제한 문제 우려

현행 제도 → 제도 개편(안)		개편 시 쟁점
활용	이용 범위	○ 농지면적 감소 vs 농지 활용성 향상
	전용 범위	
소유·임대	상속 농지	○ 재산권 제한 vs 공적 관리 ○ 경자유전 원칙 위배 vs 농지 유통화 촉진
	임대차	
관리 체계		○ 개발 수요 억제 vs 적정 농지면적 확보

- (대응방향) 다양한 의견수렴,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식량안보 등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제도 개선 추진
- 단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농작업 편의시설 허용(화장실 등), 영농형 태양광, 농촌특화지구 허용시설 확대 등은 우선 추진
 - 쟁점이 있는 과제는 농특위 내 「농지제도 자문단*」, 농업인 단체 간담회, 농지포럼 등을 통해 농지제도 개편 방향 논의 및 공론화 진행('26.~)
- *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 중심으로 농민단체, 시민단체, 전문가, 정부위원 등 참여

②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(국정과제 70)

◆ 관계부처 협력, 의견 수렴을 거쳐 전력계통 문제, 규제 등 쟁점을 신속 해소하고 '26년 사업 운영을 토대로 우수사례 창출 및 확산

- 농업인 소득 제고와 식량안보를 함께 달성하는 **영농형 태양광 제도화**(‘26.上)
 - (쟁점) 발전사업 임차농 참여·보호와 영농활동 확인·제재 수단 필요
 - (대응방향) 질서정연한 입지, 식량안보, 주민·공동체·농업인에게 수익 환원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**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**(‘26.上)
 - 임차농 참여·보호 및 영농확인·제재 방안 구체화 후 특별법 내 규정*
 - * 마을협동조합·임차농의 사업 참여 허용, 농지사용기간 연장(8년→23),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규제 완화(농업진흥지역), 사업주체(영농법인 등) 확대 및 지원 시책, 관리체계 구축
 -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(RE100 산단 인근 등)을 **재생에너지지구**로 지정
- 농촌 유휴부지 등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고 그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**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조성**(‘26: 100개소)
 - * 한계농지·축사 등 유휴자원 활용을 통해 **농지이용률 제고 및 조성 규모 확장**
 - (쟁점) 전력계통 부족, 고령화에 따른 발전사업 어려움 예상
 - (대응방향) 전력 수요가 많고 계통에 여유 있는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선도 모델을 우선 조성하고, 전력계통 확보, ESS 설치(기후부 등 협조) 후 전국 확산*
 - *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농식품부·행안부·기후부 협의체 구성해 추진
- 태양광 이외의 농촌 부존자원 활용 **재생에너지 생산·환경기여 확대**
 - (현황) 가축분뇨·농업부산물 등 부존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은 **가축분뇨 고체연료화·바이오가스화**를 중심으로 초보적인 단계
 - (쟁점)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가축분뇨 **발전연료화** 관련 규제, **에너지화 시설의 높은 비용** 등 해결 필요
 - (대응방향)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**가축분뇨 발전연료화**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, **에너지화 시설 확충, 사용처 확대*** 등 추진
 - 고체연료 수분함량별 발전 실증 후 기준 완화(20%→50) 협의(‘26)
 - *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(‘25: 12→‘26: 15) 및 육가공업체 고체연료 전용 발전소 도입 방안 마련, 농림업부산물 에너지화 지원 검토(기존 사업방식 개선, 기재부 협의, ‘26.2월)